

학술출판,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서적 출판의 윤리와 논리

金聖哉

一志社 대표

학술출판에 대해

학술정보를 담은, 학술서나 학술잡지를 출판하는 것을 학술출판(Scholarly publishing)이라 한다. 학술출판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출판부나 연구기관 같은 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출판사의 비중이 크므로, 주로 이곳에서의 학술출판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술출판사란 무엇인가.

엄밀한 의미로는, 학술서나 학술잡지만을 내는 곳을 학술출판사라 해야겠지만, 그 대부분은 학술적 간행물이 아닌 것도 아울러 내므로, 학술정보를 담은 책을 출간하는 비중이 다른 정보나 지식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보다 높을 때, 그 출판사를 학술출판사라 해도 무방하겠다. 따라서, 문예작품이나 흥미 위주의 대중적 논픽션, 전문적이지 않은 실용서, 아동도서, 또는 학습참고서나 수험준비서 등을 주로 내는 출판사가 학술서를 좀 냈다고 해서 학술출판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 레벨의 텍스트도 넓은 의미의 학술서 범주에 들므로, 대학교재를 주로 내는 출판사도 학술출판사라 해야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출판사를 학술출판사라 하지 않고 대학교재사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다. 왜일까? 그것은 챕터운동 등 유통상의 비리, 동일 저작물을 지역에 따라 저작자 이름을 달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後註를 달고도 脚註라는 명칭을 붙이는 따위의 학술서적 구성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부실한 제작, 인용의 한계를 모르거나 내용의 盗用 등의 사례가 많아 학술출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과당경쟁

그런데, 애당초 대학교재로 의식하지 않고 학술적 해설서로 여기고 출간한 책일지도, 그것이 대학교재로 많이 쓰이게 되면, 대학교재로 쓰일 것만 골라 출간하는 일부 대학교재사들이 흔히 印稅라고 부르는 저작권사용료의 요율을 그 책을 내고 있는 출판사의 그것보다 올려주겠노라고 저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출판사가 있기에, 저작자의 일부는 계약이나 통념과는 달리, 저작권사용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딴 출판사로 옮기겠다고 하는 수가 있다.

최근 「〇〇〇〇學原論」이라는 책이 「〇〇〇〇學原理」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것도 그러



金聖哉씨

한 예의 하나이다. 개정한 것에 불과한 책이라면 책제를 바꾸지 않고 개정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거늘, 내용에 걸맞지 않은 '原理'라는 책제로 바꿈은 어쩐 일인가. 먼저의 출판사의 책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학자적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 듣자니, 옮긴 곳에서도 저작권사용료의 요율을 올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 그 책을 내고 있던 회사의 책만 영원히 죽은 책(dead stock)이 되고 말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례는 저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출판사도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부득이 다른 회사에서 낸 책의 개정판을 인수해 출판하려거든 그 출판사의 양해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책의 재고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출판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앞서 말한 저작권사용료를 올려주는 것은 저작자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몰라도 대개는 다른 출판사의 저자를 쟁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므로 문제인 것이다. 그 결과,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 저작자에게는 불만의 씨가 되기 쉽다. 만일, 일률적으로 통념상의 저작권사용료 이상의 것을 지급한다면 출판사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닌가.

제작상의 문제

직접생산비 중 조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술서는 다른 분야의 책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리하여,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학술전문서에 대해서는 출판조성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없는데다 조판비가 엄청나게 양등하여 좁은 의미의 학술서를 출판하는 데 있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뿐 아니라, 電算組版(Computerized photo-composition)이 보편화됨에 따라 종래의 活版組版(handsetting)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술서의 판짜기는 활판조판 쪽이 유리하다. 전산조판으로 학술서의 판을 짤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한글 위주의 원고는 그렇지 않지만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학술서인 경우에는 인쇄 판밀을 완성시키기까지 전산조판하는 것이 활판조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터가 한자에 대한 조예가 없어 엉뚱한 글자를 치는 수가 많은데, 교정 본 것도 음을 모르고서는 바쁜 한자를 찾아 고칠 수도 없다. 그리하여, 때로는 편집자가 원고나 교정쇄에 음을 달아 줘야 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러나, 조판 자체는 전산조판이 활판조판보다 훨씬 빠르다 할지라도 편집자는 고급인력의 시간낭비가 심하다. 거기다 각주가 있는 원고는 페이지 조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각주 처리는 出力 후에 판밀 대지에 따붙여야 하는 수가 많다. 이것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활판조판 쪽을 택하자니 활판조판 소수가 점점 줄어, 요즘에 와서 단가가 부쩍 올라버렸다. 그럼, 좀 고생스럽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산조판을 하자니 조판비 자체는 활판조판보다 싸지만 인건비를 감안하면 코스트가 맞먹게 된다.

책값과 복사 문제

생산 코스트가 오르면 결국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책값을 올리면 이번에는 독자의 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판매부수가 더 줄어들고 마는 것이다. 거기다 책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복사복제(reproductive reproduction)라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무단 복사복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어서 하는 것이다. 그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것이 학술서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려면 법이 단단해야 하는데, 현행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도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탈이다.

도서관의 자료 구입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많아 책을 너무 사들여서 개인들이 책을 덜 산다고 출판업자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마저 구입하지 않고 있다. 갖추고 있는 책마저 속아내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 텁핑으로 사들인 부실도서가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 할인으로밖에 네 수 없는 학술서는 도서관에서도 외면당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정책상의 문제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술서에 대한 당국의 배려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재벌기업에서 내는 문예지에도 원고료 지원금이나 간다는데, 학술출판사의 학술잡지에 무슨 명목이건 지원금을 줬다는 소식을 접해본 일은 그리 없다. 학술서인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문화적·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가장 기여한다는 학술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서에 대해 지원이 있었다면 정책적인 책에 대해서만 했거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에서의 출판 행위에 대해서 있었을 뿐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학술출판사가 네 수 있는 간행물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다. 곧, 3차문헌이라 일컫는 교양서 등 해설적인 학술서 대신, 경제외적 논리가 작용하는 1차문헌적 학술서나, 연구자의 연구소재나 도구가 되는 抄錄(abstract)·문현색인·문현목록 등 2차 학술정보에 대한 문현판을 간행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해설적인 학술서는 민간의 학술출판사에 맡겨도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책들을 사명감을 갖고 얼마든지 내고 있으니 말이다.

학술출판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밖에도 더 있겠으나, 학술출판사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는 이로써 대충 언급됐다고 본다.